

법무사 제1차 시험대비

시대에듀 법무사 실전 모의고사

<제 1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①		

응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시대에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dedu.c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 : [시대에듀 홈페이지 / 동영상 강의 내용 및 학습 질문]
- PC(컴퓨터) : 시대에듀 강의 재생 플레이어 창 > 우측 [학습질문]
- 모바일 : 시대에듀 앱 > 내강의실 > 강좌명 터치 > 커리큘럼 선택 후 상단의 [학습질문]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으며, 답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최종정답 공개** : [시대에듀 홈페이지 / 강의자료실]에 게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다.
- ③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⑤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문2】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 협의상 이혼뿐만 아니라 입양 역시 가족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을 요하는 신고이다.
- ②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신고적격자이다
- 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 이를 할 수 없다.
- ④ 혼인신고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나, 수리 당시에 발견하였다면 민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문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시(구)·읍·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해당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 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면 아니된다.

【문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출생신고의 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한다.
- ⑤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없다.

【문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첨부는 가능하지 않다.
- ②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는 때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의 상대방이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생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6】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양의 합의란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입양신고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입양을 하려면 양친은 성년에 달하여야 한다(민법 제866조). 성년자이면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양친이 될 수 있다.
- ②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 ③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④ 입양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7】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 ③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문8】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신고인인 경우 그 외국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신고서에는 법정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⑤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다만,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위 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자도 함께 기록할 수 있다.

【문9】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 ④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 ⑤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개명허가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